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발표를 보고



황 민 영

(농축수산물통정보 편집국장)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예시계획('89-'91)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궁급하던 정부의 수입개방에 대한 원칙과 내용이 들어났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상밖의 대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개방확대로 야기될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그것 또한 「미흡하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 이해 당사자인 농어민들의 불만이다. 이번의 수입개방예시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졸작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로서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것은 트고 지킬 것은 지키자」는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시기, 그리고 무역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오직 폐쇄적 입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장한다. 흑자는 경제에는 논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트고, 이에 농축수산물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이 외국 농축수산물보다 비싼 국내 농산물의 높은 값인 만큼 수입을 개방해서라도 국내 농산

물 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이와같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입장에서 전개하는 논리에 대해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 전개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 문제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싸움이 아닌 미국 농민과 한국 농민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농축산업이 수지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적 조건하에서는 농업과 농민의 「사활」,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산품 수출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가,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 문제가 그들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이야 어떻게 되던 2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산품 수출 촉진의 장애요인의 하나인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통해 큰 이익이 생기는 마당에 농민의 생존권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은 농업과 농민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건의, 진정 관계기관, 학계, 언론, 국회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수입개방확대를 위한 로비 등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대폭적인 수입개방예시계획 내용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옥수수, 콩, 오렌지, 사과 등의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보복불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방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우리 정부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방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며, 또한 이해 당사자인 농어민들도 냉엄한 국제경제 현실을 꿰뚫어 인식하고 대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의지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비와 함께 보다 중요시 해야만 할 것은 소비자들의 자국산 농수산물 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 저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 국제경제력 향상을 위한 농어민의 준비, 농축수산물 자급을 위한 소비자의 연대 등 모두가 미흡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구체적 이해당사자인 농어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의 결과,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도 농어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연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보다 더 농축수산업의 중요성과 농어민 문제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인식하여 농업정책을 적극 펼치고,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농어민이 담당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수입개방확대보다는 자국 농업의 보호를 통하여 식량자급과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도 농어민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언론, 학계, 정계, 사회 각계층을 대상으로 농어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입개방확대 저지에 연대하여 나서 줄 것은 농어민들이 나서서 요구해야 한다.

이 땅에는 농어민도 많지만 농어민 단체도 많고 농축수산업, 농어민, 농어촌을 연구하는 학자, 연구기관은 많지만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가 물고올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식도 형편이 없음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기대했던 정당, 국회의원도 오늘의 농어업, 농어민 문제에 관한한 무능력에 가깝고, 특히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점은 그 많은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농어촌, 농어민 문제에 대한 무감각이요,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농어민의 절규에 대해 구체적 대안과 행동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농어민단체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진실로 조직원인 농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신장시키는데 있어서, 당면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 저지 만큼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결을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농수축협도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화, 개방화시기 농수축협이 보다 전면에 나서서 당면한 농어촌, 농어민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때 농어민들도, 농어민 단체들도 적극 동참하게 되고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역량도 결집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 저지, 그리고 부당한 수입농축수산물의 불매운동에도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누가 주도하여 나갈 것인가. 이해 당사자인 농어민이 나서야 한다. 최근의 출발은 작고 어설피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주적 힘과 조직만이 오늘의 농어민이 처한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것이다. **■**